

감사원, 박광태 전 시장 아들 땅 특혜 의혹 감사 착수

감사관 3명 파견해 16~18일 광산구 사전 조사 진행
광주 소촌공단 용도변경·심의위원 운영 등 특혜 여부 집중 감사

감사원이 박광태 전 광주시장(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대표이사) 아들 소유의 광주소촌농공단지(산단)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광주시와 광산구가 자체 감사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15일 감사원과 광주시, 광산구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16~18일 3일 동안 광산구 등에 조사관 3명을 파견하고, 본 조사에 앞선 사전 조사(예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20일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포함해 공익감사를 해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다. 광산구도 같은 달 4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추가로 특혜 의혹이 드러나면 별도로 수사의뢰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광주시는 2018년 3월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의 해당 산업 용지 매입 당시 입주 절차, 용도변경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 유출 경위와 외압 유무, 명단 유출 책임 등을 집중 확인한 끝에 '상당한 특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익감사 청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일단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내 4500여㎡ 제조시설(공장용지)이 지난 4월 광산구의 승인을 거쳐 산단 지원시설로 용도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전 시장의 아들이 해당 용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취득·매입 관련 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자료 수집에도 나설 예정이다.

실제 광주일보가 확인한 결과, 산업단지 용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양수 과정부터 입주 때까지 관리기관(광산구)의 신고·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광주시 업무 담당자는 지원시설 변경을 반대했던 1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셀프 유출'하고, 되레 명단유출을 핑계로 전체 위원을 교체한 사실까지도 밝혀진 상태다.

1, 2차 심의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열

린 1차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선 심의위원 대부분이 용도 변경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지만, 거부(可否) 투표를 앞두고 광주시 의견에 따라 투표를 미루고 재심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후 반대 목소리를 냈던 1차 심의위원들은 재심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는데, 광주시 업무 담당자가 스스로 심의위원 명단을 광산구측에 '셀프 유출' 한 뒤 명단유출을 핑계로 1차 심의위원을 전원 교체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정 안팎에선 "반대 목소리를 낸 1차 외부 심의위원이 모두 교체됐으며, 2차 심의위에선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는 말까지 떠돌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6월 열린 2차 심의위에선 안건이 통과됐고, 24개 조건을 달아 용도변경 승인 여부를 광산구가 결정하라는 통보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각종 의혹 속에 꾸러진 2차 심의위에서도 참석위원 13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6명이 반대표를 던졌을 정도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후 광산구는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24개의 조건을 달아 통과시킨 박 전 시장 아들 소유의 소촌산단 토지 용도 변경안을 전달받고 승인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겠다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자문위원 9명 중 8명을 자기편이라 할 수 있는 광산구 공무원들로 배치했다.

외부 민간 전문가는 1명 뿐이었다. 이렇게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 4월 4일 용도 변경 승인 고시 직전까지 한 달여간 활동했고, 광산구는 이들의 의견을 근거로 용도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이 밖에도 용도변경 과정에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개발계획·관리기본계획·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등 필수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소촌농공단지 내 지원시설 면적을 초과하면서까지 용도 변경을 최종 승인한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은 "광주시와 광산구 모두 문제가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만큼 철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잘못된 승인·고시 절차를 철회하고, 특혜 관련자들도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물총싸움으로 재해석한 봉오동 전투 광복절인 15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흥범도공원에서 고려인마을 주민들이 봉오동전투를 물총 싸움 등 여름 축제로 재해석해 재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고의없는 교원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뎀 생기부 기재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함께 14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

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교권·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그간 현장 교사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법령 개정 에 나선다.

교육부는 우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 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

현재 이러한 내용으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국회 처리를 지원해 교원의 정당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지금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의 모호성 때문에 교원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르고 무고성 아동학대에도 교원들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교육부는 또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무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무원법 44조2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 민원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되는 교원은 직무해제가 되는 것이 수순이어서 교원들의 반발이 컸다.

피해 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한다. 대신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방안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생 보호자에게 특별 교육·심리 치료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돌파구 찾을까 ▶2면
- "내 땅 통행 말라" 펜스 치고 등하곶길 막아 ▶6면
- 112구 투혼 양현중, 만루홈런에 '와르르' ▶18면

2023 청소년 사회 탐구 캠프

지역사회 문제 해결사를 찾습니다

세계로 준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접수기간
2023. 8. 14. 월 ~ 9. 4. 월

선발대상
도내 고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인문사회 분야 (자율)동아리
※ 학교 내 운영 동아리 및 사업참여를 위해 구성된 동아리

접수방법
전자우편(e-mail)접수 : hsm292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jntle.kr)참고

안내처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 ☎ 061)286-3442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 061)286-9484

전라남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